

#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조 과제

## 한국노총 경기도 조직의 지역사회 연대 상황을 중심으로

박현미\_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경제활동의 위축은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지역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사회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 해결의 주체로 지역이 부상하면서 지역사회 주체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의 지역사회 연대 및 결합 상황에 주목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상황,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핵심 주체의 한 축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방안에 주목한 데 따른다. 분석자료는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본부와 15개 지역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의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결합 상황은 매우 취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노총 과제로서 △기업별 노사관계 및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 혁신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 추구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제 해결은 한국노총 중앙의 지역전략 정책 수립과 실천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상황
- III.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과 정치활동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sup>1)</sup>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경제 활동은 물론 소비생활도 크게 위축되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노동 계층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사회통합이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화두로 급부상하였다. 전체 사회는 물론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특성,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제주체들 즉 지역의 노사정이 사회적 협의를 통해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진해 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선진국 노사가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인적자원개발과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해 나간 사례는 지금 주목할 만하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개입하거나 동참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핵심 이슈를 해소해 나갔다는 점이다.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이 많이 소개되었으며 지역단위의 파트너십에 근거한 인적자원개발 등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고용 거버넌스 역량(지역주체들 간 협력 수준)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김민영·임업, 2017:111).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 지 길게는 20년 이상이 되었지만 후하게 평가해도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역의 핵심문제인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기반으로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노동계가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법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sup>2)</sup> 다만 이 글은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구축을 위한 노동조합 과제에 초점이 있는 만큼 참여 주체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

1) 이 글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1년도 정책연구과제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과제-한국노총 경기지역을 중심으로』(박현미·유병홍·우상범)를 토대로 한다.

2) 단적인 예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제도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다수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무국이 설치된 지역은 2020년 말 158곳 중 45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글의 연구대상인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구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 이중 사무국은 광역 1곳과 기초 11곳에 설치되어 있다.

화 방안에 주목한다. 이에 이 글은 노동조합의 현재 위상,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우호세력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전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사회운동 조합주의의 특징 중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의 결합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연대 구축이란 두 가지 측면을 주시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 과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의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결합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상황,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상황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과 지방정부, 지역의회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논의를 토대로 향후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협치 체제인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노총 조직의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참고로 먼저 연구대상과 분석자료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차원이나 지역의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 경기도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있다.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는 1,390만 명(전국 인구의 26.4%)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다. 경기도 경제활동인구는 750만 명(전체의 26.4%), 취업자 수는 727만 명(전체의 26.2%)으로 모두 전국 1위이다(경기도청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의 경우 광역과 기초 지자체인 31개 시군구에 대표적인 고용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도 모두 설치되어 있다. 한국노총 차원에서도 조합원 16여만 명을 포괄하고 있는 경기도본부는 15개 지역지부로 구성된 최대 지역조직으로 활동력도 우수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글에서는 경기도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자료는 2021년 7월 1일~23일까지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와 14개 지역지부에서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뷰 내용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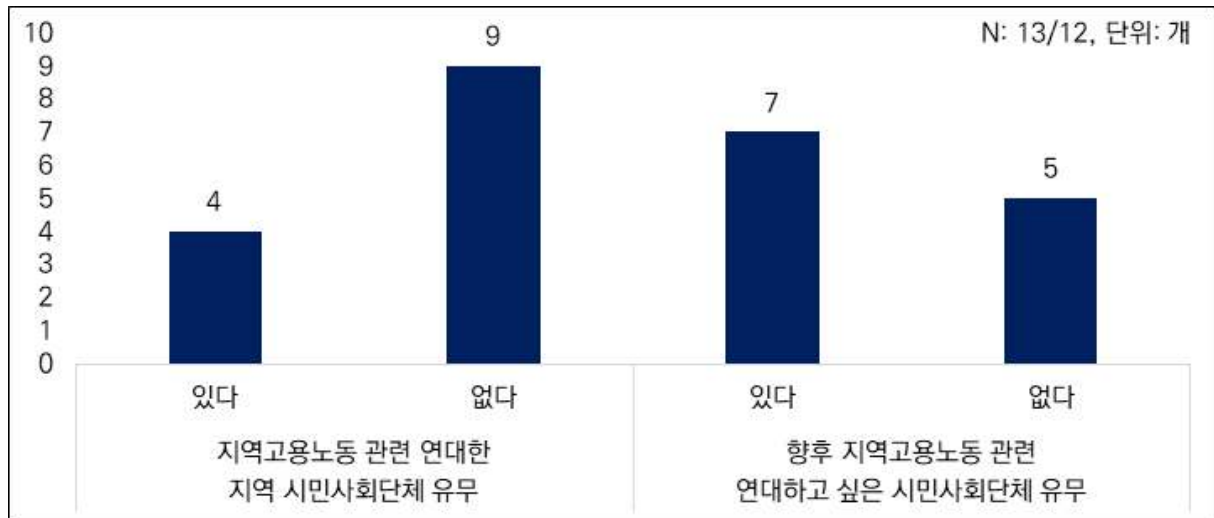
## II. 경기 지역조직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상황

### 1.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한국노총 경기지역 조직들을 대상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경험을 알아본 결과 그 경험은 매우 취약하였다. 조사 응답 조직 13개 중 4개 조직만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경험이 있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한국노총 지역조직 간 연대 경험이 취약한 주 배경의 하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과도 관련된다. 물론 그 핵심 배경에는

기업별노조 기반의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단사의 노동조건을 넘어서서 지역의제에 결합하려는 의지나 실천이 부족한 현실도 있다.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다수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14개 중 12개 조직)고 답했지만 응답조직 12개 중에서 향후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와 관련해 연대 혹은 논의하고 싶은 시민사회단체가 있다는 조직은 7개이다. 연대 혹은 함께 논의하고 싶은 시민사회단체가 없다는 응답 조직도 5개에 달한다([그림 1]). 이유는 마땅한 시민사회단체가 없어서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등이다. 실제 인터뷰 과정에서도 지역조직 간부들은 연대할 만한 시민사회단체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노조와의 연대를 주저하고 있다.

[그림 1] 경기지역조직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대한 생각



주) 조사대상은 15개인데 각 문항에 대한 무응답 조직은 각각 2개, 3개 조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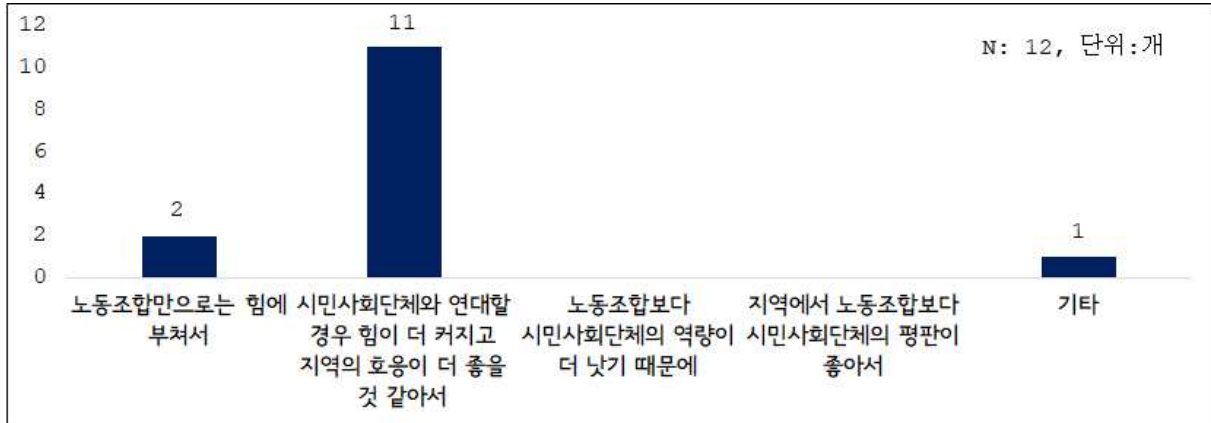
## 2. 연대단체와 사업추진 내용

한국노총 경기지역 조직들은 2021년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해왔다. 연대한 단체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센터 등이 있고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회나 상공회의소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연대 희망 단체로는 노동단체 및 유관 단체, 비정규직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의 경영자단체도 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 조직들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경우 힘이 더 커지고 지역의 호응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그림 2]). 지역조직들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할 경우 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자원이 더 커지리라는 사실을 잘 인

지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도에 한국노총 경기지역 조직들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활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주:무응답 3개 조직

A지부는 00시 노동존중, 노동운동 연대 등을 위해 00시민연대와 사업을 함께 했다. C지부는 코로나19 대응 C시고용대책위원회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있는 농민, 노동자 실태 파악 및 지원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해왔다. 2020년 10월에 창립된 이 대책 위에는 한국노총 C지역지부, 민주노총 C지부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기관 등 24개 단체가 참여했다. 창립 당시 대책위는 노동조합, 비정규, 청년, 여성, 고령, 장애 등 분야별 단체나 전문가들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C시민들의 고용현황 파악, 정책 마련, 공동 실천을 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C시 고용현황 조사, ▲소규모사업장 및 취약업종 고용보험 가입 독려, ▲고용위기 C시민을 위한 법률지원, ▲고용위기 사업장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통해 영역별, 이슈별 사업을 펼쳐가기로 했다(경기매일, 2020.11.09.).

〈표 1〉 경기지역조직이 지역 고용노동문제와 관련해 연대/논의했던 시민사회 단체

구분	단체명	사업명 혹은 사업내용(2021)
A지부	OO시민연대	OO시 노동존중, 노동운동 연대 등
C지부	C시고용대책위원회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에 농민 노동자 실태파악 및 지원책
L지부	L상공회의소	청소년일자리창출
N지부	OO시 비정규직센터	공동 캠페인 및 상담
	OO당 지역운영위원회	지역노동자 권익보호

N지부는 OO시 비정규직센터와 함께 공동 캠페인 및 상담 사업을 진행했고 지역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노동자 권익보호 사업도 전개했다. 이 지역운영위원회는 지역 시의원, 도의원, 지역 시민단체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지역에 민원이나 애로점, 의회에 바라는 점 등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N지부는 노동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N지부 관계자). L지부는 상공회의소와 함께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논의했다.

### Ⅲ.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과 정치활동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방분권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으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생활정치 공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서 지역 정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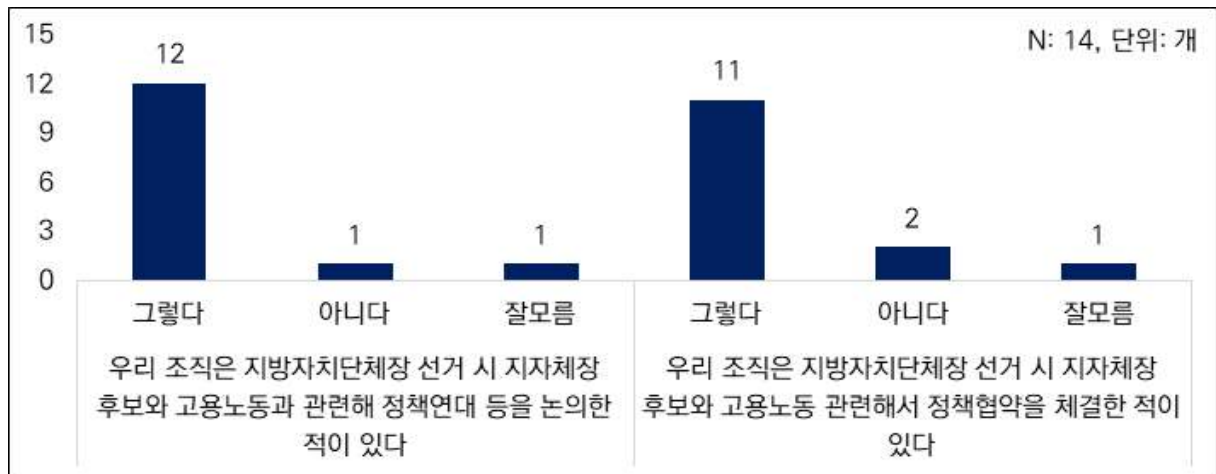
#### 1. 지역조직들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먼저 경기도 지역조직과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경기지역 조직들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지자체장 후보와 고용노동 관련한 정책연대 등을 논의한 적이 있는 조직은 응답조직 14개 중 12개 조직이다. 더불어 고용노동과 관련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조직은 응답조직 14개 조직 중 11개 조직으로 나타났다(그림 3). 예컨대 2018년에 B나 N지부 등에서 지자체 선거에 나선 시장 후보들과 노동존중 정책연대(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8년 한국노총의 6.3 지방선거 방침과도 연결된다. 당시 한국노총은 지방자치를 진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위

해 6.3 지방선거에 적극 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한국노총, 20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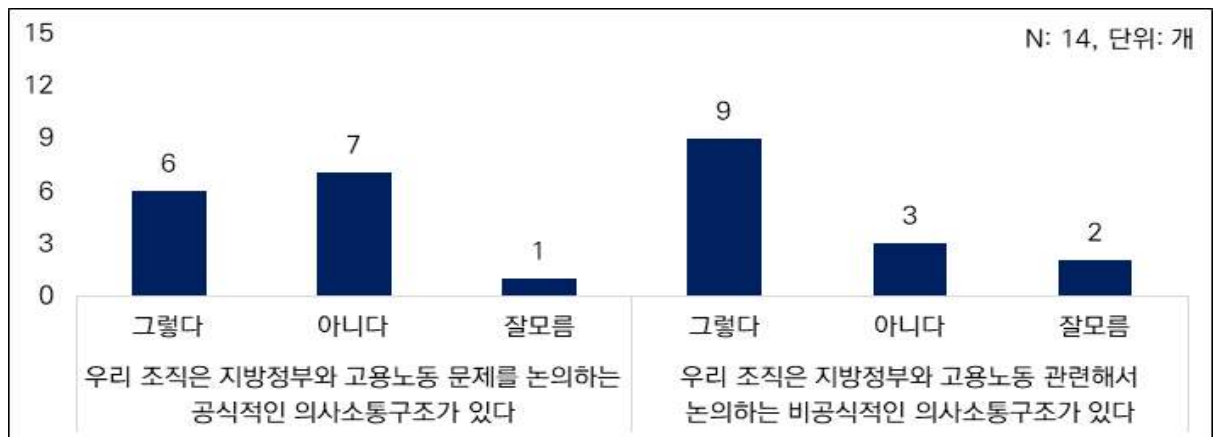
경기지역 조직과 지방정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른 질문은 지방정부와의 의사소통 구조 유무이다. 조사 결과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들 중 지방정부와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다는 조직은 14개 중 6개, 없다는 조직은 7개였다. 반면 지방정부와 고용노동 관련해서 논의하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는 조직은 9개로 다수였고 없는 조직은 3개에 불과하다(그림 4).

[그림 3] 지역조직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주) 각 문항에 대한 무응답 조직은 각각 1개 조직임.

[그림 4] 지역조직과 지방정부와의 의사소통 구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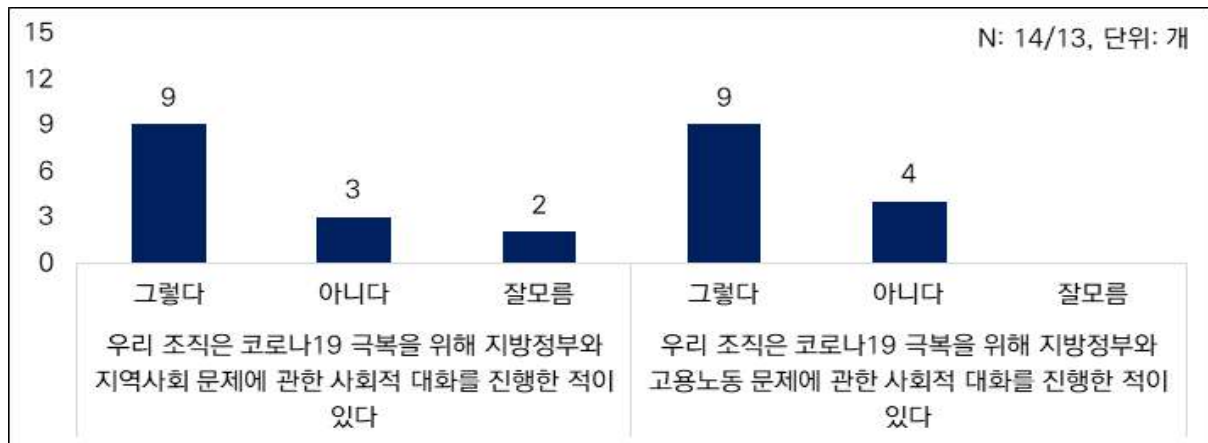


주) 무응답 조직은 각각 1개 조직임.

종합하면 한국노총 경기도 지역조직들은 지방정부와 공식적 의사소통 구조보다는 비공식

적 의사소통 구조를 좀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서 노동조합이 그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하며, 지방정부의 노동,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조합이 지자체와 공식적으로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문제나 노동조합을 잘 이해하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지자체 파트너가 있어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또한 지역사회의 관료나 토호 등 기득권 세력은 사실 노동 친화적이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다. 때로 노동조합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기도 하며 실제 그런 사례들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이나 지자체 모두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면 서로 공식 통로로 소통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초유의 위기 상황이었던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서는 지역조직 다수가 지역의 사회문제나 고용노동 문제와 관련해 지방정부와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것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지역의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5] 지역조직과 지방정부의 사회적 대화 현황



무응답 조직은 각각 1개, 2개 조직임.

## 2. 지역조직과 지방의회(시·도의회)와의 관계

지역의회는 노동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생활정치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국노총 지역조직은 지역의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자치규범인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 수 있다. 노동조합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방의회란 공간은 노동자 등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합법적인 투쟁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총연맹인 한



국노총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듯이 지역조직들은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노동자 등 시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의회와의 관계는 조직 간 편차가 매우 컸다. 여야 지방의회 의원들을 모두 활용하면서 지원을 받는 사례에서부터 여 혹은 야당 의원들 중 한 쪽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례, 여야 모두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사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이나 조합원의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시·도 의회) 여야 의원들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조직 중 여당 지원을 받았던 조직은 7개였고 야당 지원을 받았던 조직은 3개였다. 여당 지원사례가 좀 더 많았다. 그 사례를 보면, C지부는 C지역 거점 종합병원인 OO병원 폐업철회 및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C시 시민사회단체에서 해결을 모색했을 때 여당의 지원을 받았다. I지부는 노동계의 활동 및 예산 관련해서 여당의원으로부터 적극 지원받았다. G지부는 사업장의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의회와 G시 의회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오비맥주 경인 직매장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과정에서 경기도 의회 여당의원 8명이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G시 의회 전체 차원에서 고용승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외 조직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당의 지원도 있었다. 예컨대 공무원 노조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G시 의회 의장이 중재하려고 노력하였다. 택시, 버스업종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여당원이 지원하였다. 야당의원 지원 사례로는 I나 D지부 사례가 있다. I지부의 경우는 야당의원들과 공장이전으로 인한 고용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D지부는 건설 관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 Ⅵ. 나가며

이 글은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지역사회 연대 차원에서 참여 주체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여기서는 한국노총 경기지역조직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상황, 지역조직의 정치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 조직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 기업별 노사관계 및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 혁신

한국노총 총연맹이나 지역 및 산별조직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 노조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면서 기업별 노사관계 및 임금노동자,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별 노조를 근간으로 조직체계나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담장 밖의 ‘일하는 사람들’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의미 있는 활동과 그 의미를 팩스나 SNS 등을 통해 사업장의 노조와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노총 총연맹, 지역, 산별조직 등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향상 관련 활동이나 해당 지역의 현안 대응활동,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현장 조합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 담장 안 노동자들이 그 너머에 한국노총, 산별연맹, 지역조직 등 상급단체가 있고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별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에만 갇혀 있는 조직노동 중심의 노조와 조합원들의 시야를 좀 더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 2.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

향후 한국노총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 영역을 염두에 둔 지역사회 연대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확보하고 한국노총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지역조직들이 고려할 만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노동조합 연대 방식으로는 C지부의 공대위 참여 방식이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의 공동대책위 참여는 한국노총 조직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다.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대위 활동은 한국노총이 지역사회에 노조의 역할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노총 중앙은 물론 지역조직들이 그간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노동계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노조와의 연대를 주저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과 지역조직들은 조직노동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점차 확대되는 지방자치에 따라 지역의 경제사회 정책이나 발전에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 핵심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그 역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3.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강화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조사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향후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확산하는 상황을 보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의회에 대한 감시, 개입 활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 정치 참여의 통로가 되는 각 정당의 지역위원회나 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핵심 주체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노동조합들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협의체이다. 이번 조사에서 N지부는 한 정당의 지역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지역의 노동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여성,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농어민 등의 관련 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sup>3)</sup>. 정당들이 지역에 유사한 종류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에서 조직적으로 각 부문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파편적이지만 핵심적인 과제들은 사실 한국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중앙과 지역, 산별조직을 긴밀하게 결합하는 ‘노동조합의 지역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될 수 있다. 지금은 지역의 일자리, 경쟁력 등이 화두로 등장하고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역조직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 방향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이러한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의 지역조직이나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실질적인 지원, 전략 등은 매우 미흡하다. 국가의 지역정책 방향이 한국노총이나 지역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의 지역 전략 수립은 시급하다. 한국노총 내 지역전담부서(혹은 특별위원회 등) 신설 및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사회 개입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을 찾아

3) [https://www.minjookg.kr/sub06\\_introduce/organization.php](https://www.minjookg.kr/sub06_introduce/organization.php)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

지역조직을 지원, 육성해 나가야 한다. 시급하게는 한국노총 차원에서 지역의 간부나 활동가의 전문성 등 역량 제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노총 지역조직 간(권역별, 업종별 등)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역 포럼 등을 통한 인적/단체 간 교류 등은 그 시작일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금도 한국노총 차원에서 결의를 통해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 시대 화두인 지역의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통한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역량 있는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참여와 개입 속에서 가능하다. 최상의 복지인 양질의 일자리 문제 해결도 바로 이러한 현장의 소통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향후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내고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국노총 조직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중앙의 사회적 대화 진행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경기매일(2020.11.09.). 기사명: 코로나19 대응 00시 고용안정대책위 발족.

김민영·임업(2017), 「시민단체 및 고용 거버넌스의 역량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5), pp.109~132.

한국노총(2018), 「2018년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

경기도청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홈페이지.

### 〈노동N이슈 주제 제안〉

\* 노동N이슈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내용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운영실 02) 6277-0161

wnsaud0409@inochong.com